

논문

## 해외파병 논쟁으로 본 조선과 대한민국

계승범(서강대)

### < 국문초록 >

한국사회에서 해외파병 관련 논쟁은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전 조선시대 때에도 명이나 청의 요구에 따른 파병 여부 논란은 무려 15차례가 넘으며, 그 논쟁의 성격 또한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성격과 유사한 면이 있다. 조선왕조는 명나라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출범했고, 명나라가 주도한 동아시아의 '명질서' 안에서 국가 안위를 유지했으며, 임진전쟁(왜란)이라는 누란지세의 위기에서는 명의 물리적 도움에 힘입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명과 조선의 관계는 기존의 군신관계에 부자관계가 더 해져 영원불멸의 가치로 이념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17세기에 후금(청)이 흥기해 명을 붕괴시키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자 조선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부자관계는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절대가치였기에, 청의 위협 앞에서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외교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명질서' 하에서 형성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레종데트르를 둘러싼 논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국가 탄생부터 냉전시기 내내 미국이라는 새로운 초강대국의 보호막 속에서 출범하고 안보를 보장받았던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PRC)의 흥기와 미국의 쇠퇴로 인해 더욱 가시화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의 와중에 대한민국이 굳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동맹을 숙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본질은 단순히 외교문제나 국가이익문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역사적 시각에서 다룬다.

주제어: 해외파병, 조선, 대한민국, 명, 청, 미국, 중국, 국가정체성

## I. 머리말

나는 최근에 출판된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라는 책에서 전근대 조선왕조를 통시대적으로 살피되, 명·청의 파병 압력에 따른 조정 논의라는 주제를 통해 한중관계를, 특히 조선 엘리트의 명·청 인식의 실체를 조망하고, 그것이 한국사에 어떤 유산으로 작용했는지 거시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해외파병 문제를 다루면서 굳이 지배층의 대외인식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파병 여부가 바로 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며, 그 결정은 그들의 대외인식, 특히 조선시대라면 양반 지배엘리트들의 중국관에, 지금이라면 정치주도계층의 미국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금의 이라크 파병이나 아프간 파병 문제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한반도 안팎에서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과 그것을 대하는 한국 엘리트들의 마인드에는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있다.

조선인의 중국관은 건국과 함께 공표된 사대와 유교라는 두 개의 국시에 잘 드러난다.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정책이 자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당시 지배엘리트 입장에서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화

정책이었다. 압록강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북경에 도움을 둔 거대 제국의 근처에 위치한 조선으로서는 그 초강대국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조선 버전의 글로벌 정책이었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그 초강대국에서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는 행위는 조선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출발 과정도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갖던 중요성은 명이 조선에 대해 갖던 중요성보다 훨씬 더 컸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외교류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고, 근대화를 추진하고 국민국가를 구축하는 데에도 미국의 역할은 거의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 그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적 군사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해외파병 문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외파병 논쟁을 통해 조선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구도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아,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열강들의 힘이 대치하는 지역으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단 상황은 그 가시적 증거이자 솔직한 현실이다. 또한 조선의 문화 발전과 국가 안위의 배후에 명·청이 있었듯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과정 또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배후에 업었기에 가능했고, 현재까지도 그 미국의 방어 우산 속에 (질서 속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PRC)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외관과 외교관이 주변 정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조선인의 명·청 인식과 한국인의 미국 인식의 기저에 서로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그런 인식이 명·청이나 미국의 해외파병 압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가능하다. 비록 ‘현대’의 옷을 입고 대미외교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옷 속에 감추어진 의식구조(마인드)와 역학구조는 예전의 대명외교를 추진하던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 글에서는 조선의 해외파병 사례와 관련 논쟁들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을 ‘역사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평론 식으로 살피려 한다. 현재의 상황을 횡적(현대정치학과 이론들)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적(역사적 연속성)으로도 보려는 것이다.

## Ⅱ. 조선전기 파병 여부 논쟁의 양상

명나라의 첫 조선군 파병 요청은 1449년(세종 31년)에 야선(也先 Esen)이 이끄는 몽골이 흥기해 위협을 가하자 명이 그 반격으로 대규모 몽골 원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 골자는 야선에 대한 대규모 원정을 준비 중이니 조선도 10만 병력을 요동에 파견해 명을 도우라는 것이었다.<sup>1)</sup> 그러나 조선 조정은 출병할 경우 왜나 여진이 그 틈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구실을 내세워 청병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 조선의 강토를 굳건히 지켜 번국(藩國)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회답했다.<sup>2)</sup> 그런데 명의 원정이 참패로 끝나고, 오히려 야선의 군대가 북경을 포위하는 급박한 상황

1) 『세종실록』 125권 31년 9월 9일 병술.

2) 『세종실록』 125권 31년 8월 16일 계해; 9월 19일 병신. 이때 조정에서는 갑작스런 징병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과 중국(명)에 뜻이 있는 야선이 굳이 병력을 나누어 조선을 치러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파병을 위한 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발생하자<sup>3)</sup> 명은 다시 조선에 원병을 청했다. 그러나 야선이 며칠 만에 포위를 풀고 퇴각하자 모든 원군 요청을 즉각 중지함으로써<sup>4)</sup> 파병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국방강화책도 특별히 시행된 것은 없었다.

조선 조정이 파병은커녕 국방 강화책과 관련해서도 특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이 사태를 조선과 무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경을 포위할 정도로 막강한 몽골 군을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어차피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유사시에는 몽골과 강화하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sup>5)</sup>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의 국방강화론도 사실은 몽골과의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의 논점은 강화를 하더라도 고려가 거란을 크게 무찌른 뒤에 강화했던 것처럼 조선도 몽골 군대를 한번쯤은 크게 무찌른 뒤에 강화를 해야 국토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6)</sup> 이렇듯 모든 조정 신료들이 강화를 최선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명을 위해 파병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조선의 파병 거절에 대해 명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정세와 관련이 있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있었던

3) 친정에 나섰던 황제까지 포로로 잡힌 참패와 몽골의 북경 포위 상황에 대해서는 Frederick W. Mote, "The Tu-mu Incident of 1449", in Frank A. Kierman, Jr. and John K. Fairbank eds., *Chinese Ways in Warfar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243-272; Denis Twitchett and Tilemann Grimm, "The Zhengtong, Ching-tai, and Tien-shun reigns, 1436-146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325-330 참조.

4) 『明史』 11(臺北: 國防研究院, 1963), 86쪽 4~6행.

5) 『세종실록』 125권 31년 8월 16일 계해; 126권 31년 10월 1일 무신; 127권 32년 1월 15일 신묘.

6) 『세종실록』 127권 32년 1월 15일 신묘.

두 차례의 요동정벌 계획 등으로 요동 지역을 둘러싼 양국 간의 긴장이 여전한 상태였기에, 명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군의 요동 진주는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경이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서 조선에 원병을 청했다가 불과 닷새 만에 취소하고, 두 달 뒤에는 다시 칙서를 보내 조선군은 국경만 지키지 더 이상 진군하지 (요동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재차 다짐해 둔 것도<sup>7)</sup>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파병 거절로 인한 명과의 외교 갈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18년 뒤인 1467년(세조 13년)에 명은 조선에 다시 파병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건주여진(建州女眞)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건주여진은 일 년에 거의 백 차례나 요동 변경을 침범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sup>8)</sup> 또한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직첩과 녹봉을 받고 있었으므로, 명 조정은 건주여진과 조선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sup>9)</sup> 명의 출병 요청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칙서의 골자는 명군(明軍)이 건주여진을 공격할 것이니 조선군은 남쪽에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압박하라는 것이었다.<sup>10)</sup>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반응은 세조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파병 일변도였으며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칙서를 받자마자 세조는 명군이 9월 22일에 요동을 출발하여 27일에 건주여진을 공격한다고 하니 따로 의논할 것도 없이 조선군은 바로 그 날짜에 맞추어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11)</sup> 이에 조선의 출병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곧 남이(南怡, 1441~69) 등이 이끄는 만 명의 군사가 출정해

---

7) 『세종실록』 127권 32년 1월 5일 신사.  
 8) 『建州私志』 上 1左, 『清初史料四種』(北京: 北平圖書館, 1970).  
 9) 『명사』 320, 3654면 1~2행.  
 10) 『세조실록』 43권 13년 9월 14일 병자.  
 11) 『세조실록』 43권 13년 9월 14일 병자.

큰 전과를 올렸다.<sup>12)</sup>

그러면 세조와 조정 신료들은 명의 청병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했을까? 먼저 청병이 있기 전에 조선이 독자적으로 건주여진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 건주여진은 요동뿐만 아니라 조선의 변경도 침범했으므로, 변경을 안정시킬 필요를 느낀 세조는 대대적인 정벌을 명했고, 즉시 15,000명에 달하는 원정군을 편성하고 작전 계획에 돌입했다.<sup>13)</sup> 그런데 계획을 수립한 지 열흘 만에 함경도에서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발생하는 바람에 여진 정벌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 반란을 석 달 만에 평정하고 여진 정벌을 다시 고려할 즈음에 건주여진을 함께 치자는 칙서가 때맞춰 도착했다.<sup>14)</sup>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출병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당시 건주여진의 회유 문제로 인해 조선과 명의 관계가 매우 꺾끄러웠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명은 건주여진 추장들이 명에 복속한 후에도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알더라도 묵인했다. 그러나 1450년대부터 건주여진의 요동 침입이 빈번해지자 조선과 건주여진의 군사적 결탁 가능성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로 인해 명은 1459년에 조선에 두 번이나 칙서를 보내 중국과 경쟁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sup>15)</sup> 당시 동아시아에서 초강대국인 명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조선의 손해가 더 클

12) 『세조실록』 44권 13년 10월 10일 임인; 『명사』 320, 3654쪽 3~4행. 전과의 주요 내용은 추장 이만주(李滿住)를 포함해 참수 45명, 사살 225명, 이만주의 처자를 포함해 생포 24명, 한인(漢人) 구출 7명 등이다.

13) 『세조실록』 42권 13년 5월 5일 기사; 6일 경오.

14) 『세조실록』 43권 13년 8월 17일 경술.

15) 『명사』 320, 3654쪽, 1~2행. “...彼既受朝廷官職 王又加之 是與朝廷抗也 王素秉禮義 何爾文過飾非...”.

것이 자명했기에, 세조의 적극적인 파병은 명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로부터 12년이 지난 1479년(성종 10년)에 명은 건주여진을 다시 치고자 조선에 한 번 더 파병을 요청했다.<sup>16)</sup> 이때 조정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는데, 결국에는 명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단 파병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sup>17)</sup> 그런데 며칠 후에 올라온 한 통의 상소는 이 결정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상소의 주인공은 1467년(세조 13년)의 건주여진 원정에 종군한 바 있는 하급관리 정효종(鄭孝終, 승문원참교)이었다. 그는

... 신이 듣건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 마을에 싸움이 있으면 비록 문을 닫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일로써 말한다면 ... 이것은 우리에게 이웃의 싸움이니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 옛말에 이르기를 이적(夷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은 이웃 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백성을 내몰아 [그들의] 창칼 사이로 나아가게 해 타국의 이익을 도와주겠습니까? ... 만약 세조께서 이미 [청병에 응해] 순종했으니 지금에 와서 홀로 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금년에 따르고 명년에 또 따른다면, 신은 상국이 [이를] 보고 [청병을] 예삿일로 여겨 오랑캐를 정벌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함이 한 뼛속에 있는 것처럼 [쉽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즉 그것에 일일이 [다] 응할 수 있겠습니까? ... 혹 황제의 명을 중히 여겨 부득이 응해야 한다면 ... 다시 봄날의 화창한 때를 [거병] 기일로 삼을 것을 청하고 ... 혹시 중국이 기일에 앞서 [단독으로 정벌에] 나선다면 우리 백성은 전쟁에 나가는 수고가 없을 것입니다. ... 대개 오랑캐가 우리를 침범하는 까닭은 정해년(세조 13년) 싸움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 건주의 주장 이만주는 성심으로 투화했으므로 본래 [우리와] 원한이 없

16) 『성종실록』 110권 10년 윤10월 11일 계해.

17) 『성종실록』 109권 10년 10월 29일 신해.

었는데, 이제 정해년의 싸움 때문에 원한을 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침범해 오니 어찌 해가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갑에게 노한 것이 을에게 옮겨간 [것 같아, 우리가] 남을 대신해 적을 맞게 되었으니 신은 그 것이 과연 가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sup>18)</sup>

라고 하여, 쓸데없이 이웃의 싸움에 개입해 남 좋은 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아울러 명에 대한 사대정책도 조선에 유익이 될 경우에만 유지해야 한다는 더 큰 논리를 그 바탕에 깔고 있었다. 이런 주장은 명을 그저 하나의 이웃 나라로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정효종의 이런 생각이 성종을 비롯해 당시 조정 신료들 사이에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파병에 찬성하던 대신들조차도 이 상소를 계기로 파병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며, 성종은 칙사에게 파병은 하겠다고 했으나 출병 시기와 작전 날짜를 꼬투리 삼아 끝까지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심지어 칙서의 내용을 전혀 몰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sup>19)</sup>

그렇지만 작전 기일에 맞출 수 없다고 했을 뿐 파병 자체를 거절한 것은 아니었기에 칙사가 돌아간 후에 조선의 독자적인 원정군을 편성했다. 그렇지만 출정 목적이 정말로 건주여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종은 사령관에게 선불리 공격해 들어가지 말 것과 명군이 토벌하고 지나간 다음에 살며시 들어가 포로를 잡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원정의 목적을 여진인 포로를 몇 명 잡아 북경에 보내는 데 두고 있었다.<sup>20)</sup> 특히, 당시 조선이 원치 않는 출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성종은

18) 『성종실록』 110권 10년 윤10월 7일 기미.

19) 『성종실록』 110권 10년 윤10월 8일 경신; 11일 계해.

명이 조선에게 궁각(弓角) 무역을 특별히 허락해 주었는데 이제 명의 합동 군사 작전 요구를 거절한다면 조선을 의심해 궁각 무역을 다시 금할지도 모르니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견해 여진인 포로 한두 명이라도 잡아 북경에 보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sup>21)</sup>

결국 조선의 4,000여 원정군은 압록강을 건너 몇몇 건주여진 부락을 급습해 참수 15명, 사살 1명, 한인(漢人) 구출 7명, 부녀 및 아이 생포 15명 등의 전과를 올렸다.<sup>22)</sup> 그런데 이런 전과를 올리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전혀 전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군이 공략했다는 부락의 규모는 대개 6, 7호 정도에 불과한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토벌작전은 불과 950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으로 가능했고,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는 일방적인 검거였으며, 포로를 잡아마자 즉각 귀환했다. 이런 전과에 대해 성종은 한두 명만 잡았어도 만족인데 잡은 포로가 참 많으면서 매우 기뻐했다.<sup>23)</sup> 또한 조선이 승첩을 보고하자 명 조정은 조선이 작전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는커녕 칙서에 따라 건주여진을 무찌른 것으로 간주해 크게 포상하고 금패까지 하사했다.<sup>24)</sup>

이후 17세기 초에 후금이 흥기할 때까지 명의 파병 요청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런데 1543년(중종 38년)에 조선 조정에서는 명의 청병(請兵)을 예

20) 『성종실록』 110권 10년 윤10월 12일 갑자, 10월 21일 계유; 111권 10년 11월 19일 경자.

21) 『성종실록』 111권 10년 11월 19일 경자. 궁각은 활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 수우각(水牛角)으로도 불렸다. 당시 조선에서는 그 전량을 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당시 궁각은 명의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있었는데 조선은 이 파병 여부가 있기 불과 4년 전인 1475년(성종 6년)에 명에 청원하여 특별히 그 수매를 허락 받은 바 있다. 조선전기 궁각 무역의 변천에 대해서는 曹永祿, “水牛角貿易을 통해 본 鮮明關係”, 『東國史學』 9(동국대학교사학회, 1966) 참조.

22) 『성종실록』 112:17b, 10년 12월 20일 신미; 113권 11년 1월 7일 무자.

23) 『성종실록』 112:17b, 10년 12월 20일 신미.

24) 『명사』 320, 3654면 7~8행.

상해 그 대비책을 미리 논의한 적이 있었다. 파병 관련 논의는 명 조정에서 조선에 청병해 건주여진을 다시 정벌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첩보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논의의 초점은 파병 여부가 아니라 파병 준비에 있었다. 작전 기일에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성종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칙서가 도착하는 즉시 그 작전 날짜에 맞추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사대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중종의 생각이었으며, 의정부와 병조의 의견도 파병 준비 일색이었다.<sup>25)</sup> 다른 대신들도 비록 갑작스러운 출병 준비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은 하면서도 파병 준비에 최우선을 두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던 북방사민(徙民)정책을 보류하면서까지 파병을 위한 징병을 서둘렀다.<sup>26)</sup> 그런데 명이 몽골을 막는 문제가 더 급해 여진 정토 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이 파병 준비는 두어 달 만에 중단되었다.<sup>27)</sup>

이제 앞서 살펴본 세종(1449년), 세조(1467년), 성종(1479년) 및 중종(1543년) 때의 사례를 함께 묶어 비교해 봄으로써 명의 청병을 대하는 조선 조정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세종 때 조선 조정은 한 목소리로 파병을 거부했는데, 조선과는 무관한 명과 몽골의 싸움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만일 몽골이 조선에 침입할 경우에는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미리 정해 놓고 있었다. 따라서 명의 파병 요청에 따른 고민은 전혀 없었다. 이는 사대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당시 조선 지배층 사이에서 지배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세조 때에는 한 목소리로 파병을 추진함으로써 세종 때와 정반대의 방

25) 『중종실록』 100권 38년 1월 2일 정미; 6일 신해.

26) 『중종실록』 100권 38년 1월 4일 기유; 7일 임자.

27) 『중종실록』 100권 38년 1월 28일 계유; 3월 15일 기미; 27일 신미.

침을 세웠는데, 그것은 당시 조선 조정은 명의 파병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건주여진 정토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때마침 도착한 명의 공동 군사작전 요청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건주여진 문제를 놓고 걸끄러웠던 명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출병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성종 때는 명과의 관계를 고려해 ‘생색내기’ 파병을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했으나, 그런 결정의 기준은 활 제조에 필요한 군수품을 명으로부터 계속 수입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요컨대 세종·세조·성종 때의 사례들은 겉으로 드러난 대응 방침은 각기 달랐지만, 오로지 조선의 국가 이익이나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중종 때 사례는 전과는 사뭇 달랐다. 정식 파병 요청이 있기도 전에 미리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 준비를 서두른 점도 달랐고, 그 과정에서 파병에 따른 손익계산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대응 태도였다. 그런데 일국을 다스리는 왕과 대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전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중종 대의 사례는 당시 조선의 왕과 신료들이 대명사대와 조선의 국익을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중종과 신료들은 대명사대와 조선의 국익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를 아예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런 대명의식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명의 파병 요청을 예상해 미리 파병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중종 대 조선 조정의 대명태도가 이전에 비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는 천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 했던 중종의 저자세적인 대명 태도, 한족의 문화와 유교 예법을 흠모하는 소중화 의식의 확산, 주자학의 발달에 따른 배타적 화이관의 팽

배, 그 결과 조선이 명에게 순종하는 것을 음양 관계에 기초한 천리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태도, 더 나아가 명을 부모의 나라로 여기는 인식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sup>28)</sup> 이를테면, 기존의 군신관계(가변적인 상대적 가치)에 부자관계(불변의 절대가치)가 더해진 조명관계의 특성 및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던 당시의 명질서와 그에 따른 조선 엘리트들의 명나라 인식의 변화가 파병 여부 논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강하게 조성되어 있었기에, 임진전쟁(왜란, 1592~1598)을 계기로 재조지은(再造之恩)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급속하게 양반사회에 번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는 천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종 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대명사대관계는 군신관계에 기초한 실리적 계약관계에서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가치인 부자관계, 곧 천륜에 기초한 정신적 의리관계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음)이 명(양)을 따르는 것을 아내(음)가 지아비(양)에게 순종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중종과 신료들의 즉각적인 파병 결정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28)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大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53(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Seung B. Kye, “Huddling under the Imperial Umbrella: A Korean Approach to Ming China in the Early 1500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No. 1(Seattle: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10)에 상세하다.

### Ⅲ. 17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조선의 선택

이런 식의 명나라 인식은 명질서가 존속하는 한 별 문제가 없었으나, 17세기에 들어 명이 쇠퇴하면서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조선의 심장을 찔렀다. 왜냐하면 후금(이후 청으로 바뀜)이 흥기해 명(부모)을 치는 상황에서, 조선(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 카드는 오직 하나, 곧 강력한 친명배금(親明背金) 정책뿐이었기 때문이다. 조명관계가 예전처럼 군신관계였다면, 고려 때의 경우에 보이듯이, 명·청 교체의 후유증이 그렇게까지 심각할 이유는 없었다. 왜냐하면 천명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에 천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바로 군신관계의 가변성이자 상대성이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불변의 관계이다. 따라서 부모가 위기에 처해있다면,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곧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부모에게 달려가 돕는 일이다. 심지어 부모가 죽은 후에도 자식은 그 관계를 중지할 수 없다. 이점이 바로 부자관계의 불변성이자 절대성이다. 명·청 교체의 전환기를 맞은 조선 지배엘리트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1610년대의 건주여진(후금)은 예전처럼 요동이나 조선의 변경을 침입해 약탈하고 돌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이미 국가 형태를 갖추고 명과 군사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대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명과 후금은 각기 조선의 지지가 필요했다. 명은 후금의 측면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이 필요했고, 후금은 배후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조선과의 우호 관계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조선을 사이에 놓고 두 나라의 외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첨예하게 맞붙었다. 급기야 명은 조선에 지속적으로 군대를 요청했고, 후금은 조선에게 우호조약의 체결을 재촉하면서 명을 위해 파병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

후금이 명과 전쟁을 개시한 1618년 당시에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는데, 조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명이나 후금 가운데 어느 한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솔직한 상황이었다. 다른 말로, 조선의 중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논리적으로만 보아도, 두 나라 사이에서 조선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 파병 요청을 우선적으로 거절해야 하므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후금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 파병 요청과 후금의 압력 사이에서 조선 조정이 고심했던 문제의 본질은 중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더 가까웠다.<sup>29)</sup>

따라서 광해군 대는 명의 파병 요청으로 인해 조정의 논쟁이 격렬했다. 명은 이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선에 병력을 요청했는데, 거의 모든 신료들이 찬성론을 펴고 광해군이 외롭게 반대하는 형세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파병 찬성론의 근거는 군부(君父)의 나라인 명에 대해 ‘재조지은’을 좇아야 한다는 것과 200년 사대 전통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반대론의 근거는 명의 원정은 실패할 것이라는 현실적 정세 판단이었다. 특히 후금이 요동을 장악함으로써 조선과 명의 육상교통로가 단절된 1621년부터는 조선으로 하여금 분명한 양자택일을 하도록 코너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요동 난민인 모문룡(毛文龍, 1576~1629)이 다른 난민들을 규

29) 1930년대 초에 타가와(田川孝三)와 이나바(稻葉岩吉) 등이 광해군 외교노선의 성격을 중립외교 개념으로 이해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 결과 현재는 ‘광해군’ 하면 ‘중립정책’이라는 말이 연상될 정도로 정설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중립’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나서 논의를 전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중립외교’론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계승범,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 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동북아역사재단, 2009), 150-152 참조.

합해 조선 영내인 압록강 하구의 용천(龍川)에 진지를 구축하고 후금의 배후를 견제함으로써 야기된 조선과 후금 사이의 긴장 고조에 더해,<sup>30)</sup> 명의 거듭되는 청병은 조선 조정의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특히 1622년 3월에 명의 감군어사(監軍御使)가 수군 4,000명을 거느리고 용천에 도착해 모문룡을 격려하고, 한 달 뒤에는 칙서를 가지고 한양에 당도해 정식으로 병력·군량·선박을 요청함에<sup>31)</sup> 따라 광해군과 신료들 사이의 논쟁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명의 요청에 대해 비변사는 모두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광해군은 강력하게 거부했다.<sup>32)</sup> 특히 광해군은 감군어사 같은 명 장수들이 자꾸 조선으로 나온다면 조선은 후금이 아니라 명의 장수들 때문에 무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sup>33)</sup> 이제 명의 존재가 조선의 국가안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신료들 앞에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비변사의 연이은 압력에도 광해군이 끝내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감군어사는 빈손으로 한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sup>34)</sup>

30) 모문룡의 존재에 신경을 곤두세운 후금이 직접 그의 제거를 꾀함에 따라, 후금의 침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조선으로서도 모문룡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조선이 명을 도와 후금에 대적하겠다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광해군이 모문룡을 나라의 큰 화근으로 본 데 비해 신료들은 요동의 상실에 따른 국방의 위기를 상쇄해 줄 방파제로 봄으로써 조선 조정은 끝없는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歷史學報』 193(역사학회, 2007) 참조.

31) 『광해군일기』 175권 14년 3월 14일 경술; 176권 14년 4월 13일 무인; 18일 계미; 28일 계사.

32) 『광해군일기』 176권 14년 4월 18일 계미; 23일 무자; 25일 경인; 177권 14년 5월 1일 병신; 2일 정유.

33) 『광해군일기』 176권 14년 4월 5일 경오. “昨見西報 山東諸將爭欲出來 梁監軍亦請來 而陶軍門游監軍諸唐將出來者甚多云 雖非此賊 我國果能無事乎...”.

34) 『광해군일기』 177권 14년 5월 27일 임술; 178권 14년 6월 10일 갑술. 단, 감군어사는

1618년 이후 광해군과 비변사가 명의 청병을 놓고 줄곧 대립해 왔지만, 이때의 논쟁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상황논리를 들어 명의 청병칙서에 따르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번국의 왕으로서 황제의 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항명이므로, 칙서의 거부는 이제 광해군의 외교가 은밀하게 명을 속이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명을 기피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명사대를 정(正)과 의(義)의 절대개념으로 굳게 믿고 있던 신료들의 눈에 청병칙서를 거부하고 후금과 대화를 추구하는 광해군의 정책은 사(邪)와 불의(不義)이자, 패륜 행위에 다름없었다. 계해정변(인조반정, 1623) 직후 정변주도세력이 반포한 ‘반정교서’에서 광해군 폐위의 제일 명분으로 인목대비에 대한 꺾박보다도 명에 대한 배신을 더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광해군 대 파병 여부를 둘러싼 조정 논쟁의 본질과 고민의 실체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정책대결 내지는 당쟁구도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정책대결도, 당쟁구도도 아니었다. 논쟁의 본질은 “조선에게 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고, 당시 조선 엘리트 절대다수는 당색을 초월해 명을 이웃의 한 대국이 아니라, 유일한 문명국(중화국)이자 천자국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외교노선 문제가 아니라, 명에 대한 ‘사대’와 중화문명의 바탕인 ‘유교’를 양대 국시로 삼아 출범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문제요, 레종데트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니 논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신하들에 의한 왕의 폐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종결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삼전도의 항복(1637)이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준 충

---

개인적으로 다량의 은을 뇌물로 챙겼는데, 귀국 후 대각의 탄핵을 받고 처벌되었다(『광해군일기』 176권 14년 4월 18일 계미).

격은 엄청났다. 조선은 주자학적 가치, 곧 이념에 기초한 사회였으므로, 임진전쟁(왜란)의 물리적 피해가 아무리 컸어도 조선의 지배체제에 결정적 위협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전도의 항복은 충·효에 기반을 둔 조선왕조의 지배 이념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지배층 스스로 유교의 양대 가치인 충과 효를 동시에 범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전도항복은 상황논리로는 변명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삼전도항복이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로 변명이 가능하다면, 노비나 소작인 같은 하층민들도 더 이상 양반·지주·국왕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칠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절대가치였던 충효 이데올로기의 상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조선왕조의 유교 지배이데올로기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었다.<sup>35)</sup>

이런 이유로,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1637)을 겪으며 조선이 후금(청)의 칙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존명의리(尊明義理) 이데올로기는 위기를 맞는 동시에 더욱 빛을 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청의 연이은 파병 요구는 조선의 조야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이념적 공황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군부·신자 관계로 이념화된 명과의

35) 이런 이념적 위기의식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글에 잘 나타난다. 『宋子大全』 권5 “封事” 28左~29右(『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민족문화추진회, 1993). “... 若曰 我已屈身於彼 名分已定 則弘光之弑 先朝之恥 有不可顧 竊恐此說得行 則自孔子以來 大經大法 一切掃地 而將使三綱淪九法 敦子焉而不知有父 臣焉而不知有君 人心僻違 天地閉塞 而混爲禽獸之類矣 ...” 및 『孝宗實錄』 19권 효종 8년 8월 16일 병술 “... 夫三綱五常 天之經 地之義 人所以爲人 國所以爲國者也 於其中 又有最大而尤切者 所謂 仁莫大於父子 義莫大於君臣 是也 而君臣之中 受恩罔極 又未有若本朝之於皇明也 豈比(高)麗之於宋哉 竊聞 今日一脈正統 偏寄南方 未知殿下已有麗朝之事 而機禁事密 群下有未得知耶 若然則天怒自息 民心自悅 我國其庶幾乎 如其不然 則未有大倫有虧 大義有壞 而天佑民服者也 ...” 송시열이 느낀 의기의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鄭杜熙, 『朝鮮時代 人物의 再發見』(일조각, 1997), 90-117 참조.

관계 때문이었다. 실제로 조선의 왕과 신료들은 명과의 관계를 통해 충·효를 실천했고, 그것은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내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런 조선사회에서 삼전도의 항복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굴욕 차원을 넘어, 명나라의 번국이자 유교사회라는 국가정체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중차대한 위기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청)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명(군부)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맹세한 일은 조선의 왕과 신료들 스스로 유교의 양대 가치인 충·효를 동시에 범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유교 가치를 바탕으로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지도층 스스로 그 가치를 범했다면, 그것은 체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설상가상으로 명을 치는 데에 동참하라는 청의 파병 요구는 조선 조정의 고민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파병을 한다면 조선(아들)이 청(원수)의 편을 들어 명(아버지)을 공격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양반지배층의 심리는 패닉에 가까웠다. 이 시기 청의 연이은 파병 요구를 대하는 조선 조정의 고민은 이런 딜레마에 닿아 있었다.<sup>36)</sup>

이런 심리는 이후 효종(r. 1649~1659) 때 있었던 두 차례의 나선정벌(1654, 1658)을 통해 매우 잘 드러난다. 청의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출병한 이 원정은 조선의 조야에 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북벌 담론이 휩쓸던 시대에, 북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도 대상인 오랑캐(청)의 지휘를 받으며 출정한 데 따른 정신적 공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벌론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나선정벌은 새로운 기억으로 윤색되기 시작했다. 18세기 이후 나선정벌을 대하는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는 청나라가 들어설 자리가

36) 삼전도 항복 이후 조선 조정이 청의 파병 압력으로 인해 느낀 정신적 공황 현상에 대해서는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푸른역사, 2009), 215-238쪽에 상세하다.

거의 없었다. 청나라를 기억에서 지움으로써 이제 나선정벌은 처음부터 조선과 러시아 양국 간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이전의 정신적 부담은 거의 사라졌다. 나선정벌 이야기는 민간에서 널리 읽히는 소설로까지 탈바꿈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청나라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청이 러시아에게 연전연패하여 조선에 도움을 청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뿐이었다. 청나라도 못하는 것을 조선군이 가서 무찔렀다는(정벌했다는) 이런 식의 배경설정은 이제 조선인들이 청에 대해서 내면적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계제가 되었으며, 오랑캐를 정토한 북벌이라는 ‘실천적’ 기억으로 조선인의 마음속에 되살아났음을 보여준다.<sup>37)</sup> 이는 베트남 참전의 실상을 덮고, 그것을 공산세력에 대항해 자유진영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의식화했던 대한민국의 과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삼전도의 항복으로 야기된 국가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후기 지배엘리트들은 사실상 외부세계와의 통로를 차단하고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으며, 국내에서는 존명의리나 조선중화(朝鮮中華)와 같은 매우 교조적이고 배타적인 자기우월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지배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청질서라고 하는 거대 틀 안의 조그만 공간에서 외친 내부용 자기의식화 작업이었을 뿐, 한반도라는 공간을 벗어난 국제무대에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우물 안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청을 야만국으로 무시한 바탕 위에 가능했던 조선의 ‘중화’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청질서라는 보호막이 존속하는 한 유지될 수 있었으나, 근대의 파고에 밀려 청질서가 와해되었을 때 조선은 무기력하게 근대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37) 이에 대해서는 계승범, “나선정벌과 申瀏의 北征錄”, 『軍事史研究叢書』 5(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참조.

#### IV. 21세기 대한민국의 해외파병 문제

조선시대 이전에도 외국의 파병 요청 내지는 요구에 따라 파병한 예는 적지 않다. 한반도라는 공간이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되기 이전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통일신라 때에도 당나라 내부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파병 요청이 있자, 신라에서는 3만 병력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전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용병의 성격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다. 몽골제국의 압력에 따라 고려 조정이 하는 수 없이 일본 원정에 나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공민왕 때에도 몽골제국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고려군을 파견한 예가 있다. 이렇듯, 전체 한국사에서 해외파병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해외파병 문제도 횡적(공간적)으로는 지금의 국제정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지만, 종적(시간적)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이기도 하다.

나는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기에, 이전 참여정부나 현 정부 내부의 깊은 내막은 잘 모른다. 다만, 미국의 파병 요청(요구)을 놓고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현 정부는 그런 모습이 더 심하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것은 곧 파병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에 따른 종합계산서를 뽑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나, 또는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사실에 가깝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고, 후자가 더 사실에 가깝다면 누구의 정부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파병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정파를 초월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종합계산서를 뽑아보

는 모습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내부적인 문제도 큰 요인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내외 정세의 흐름이 광해군 대와 유사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는 다른 말로,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거나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점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마치 “조선이란 어떤 나라인가?” 내지는 “조선에게 명나라는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문제로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광해군 대의 논쟁과 유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주변 초강대국의 요구에 따른 해외 파병은 곧 그 강대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180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군 때 조정 논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왕의 강제 폐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끝나게 된 것도 바로 그 논쟁의 본질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단순한 정책대결이 아니라, 명은 조선에게 무엇인가라는 차원의, 곧 조선의 국가정체성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구도 붕괴 후,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미관계의 재조정 문제이다. 냉전 구도에서는 솔직히 한미혈맹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하자면, 명질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6세기에는 그저 명에 대한 사대를 정성껏 하는 것이 곧 조선의 국익이 될 수 있었기에, 종종 대에는 명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미리 파병 준비에 매진했던 것이다. 이는 마치 한미혈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안위의 모든 것이었던 냉전 시기에 있었던 베트남 파병이 군사정부의 적극성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sup>38)</sup>

그런데 냉전구도 종식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여전히 전

세계를 휩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보다 다원화됨으로써 미국의 위상은 상대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누그러든 만큼, 중국의 부상이 오히려 괄목할만하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도 자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일 것이다. 어느 한 초강대국에 ‘올인’함으로써 국익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서 ‘외교의 다변화’라는 말을 듣는 것은 거의 일상사가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의 국익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혈맹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국익’을 말한다. 파병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모두 자기주장의 근거를 국익에 둔다. 특히 국가 실리의 준말인 국익이 사실은 진짜 속셈(자기중심적인 실리)을 감추기 위한 명분으로 쓰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모든 의견이나 주장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발표해야 하는 정치무대에서는 더 이를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그 국익의 진정한 뜻이나 개념에 대해서 예리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국가의 실리’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논의에 저해 요인이 된다. 설사 국익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논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며, 개개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정체성)이 다

38)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 의도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다. 관련 연구로는 조진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박정희 정부의 외교적 이니셔티브”, 『해외파병사연구총서』 2(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참조.

를수록 국익의 개념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떨까? 정작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정확히 무엇ियो?”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도 천차만별의 답을 들을 것이다. 비록 누구나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누구의 대한민국인가, 국민이란 누구인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면, 너무나도 다른 답들이 난무할 것이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답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도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각론에서는 견해를 달리 할지라도, 국제무대에서 이해관계를 대체로 함께 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정도의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전제되어야 건설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나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해외 파병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정파를 초월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종합계산서는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슷한 논쟁을 반복할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내지는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sup>39)</sup> 이런 사전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또는 조율을 해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이 곧바로 정치논쟁에 뛰어드니, 그 논쟁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한 정략적으로 흐르게 된다.

해외파병은 거의 100% 정치적 결정이다. 정치적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

39) 전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민족해방의 최대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한미혈맹을 대한민국이 실천해야 할 영원불멸의 절대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산적인 토론과 조율이 가능할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21세기 들어서서 불붙었던 이라크 파병 여부 논쟁의 양상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그 찬반논리에 대해서는 심양섭,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과 파병 결정 과정”, 『해외파병사연구총서』 2(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참조.

부의 정치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국제무대라는 프리즘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어느 정파의 정치행위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파병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일 뿐, 다른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왜 파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은 ‘왜’를 묻는데, 정부는 ‘안전’을 말하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의 탄생은 미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솔직히, 미국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출범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경제발전에도 미국은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는 모두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의 산물이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냉전구도가 지속되는 한 한미혈맹은 곧 대한민국의 국익과 거의 100% 일치할 수 있겠지만, 냉전 이후 현재의 정세는 미국만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미혈맹=국익”이라는 등식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다양한 토론이 보다 활기차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대한민국의 국익이 한미혈맹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16세기 때처럼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지극정성 섬기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조선의 국익과 일치하던 국제질서가 유지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그런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계속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은 결과 17세기에 조선이 당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이런 역사 인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해외파병을 조율하는 데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 V. 맺음말

조선초기(15세기)만 해도 조선 조정은 명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을 때 국가의 실익을 매우 세심하게 저울질해 결정을 내리곤 했다. 세종 때의 거절과 세조 때의 적극 파병, 그리고 성종 때의 생색내기 파병 등 그 결과는 서로 달랐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조선이라는 국가의 손익 계산이었다. 이점은 성종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게 명은 하나의 대국이었을 뿐이지, 유일한 상국(上國)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또한 당시 위정자들은 사대와 국익이 서로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했음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중국 인식은 16세기 중종 대에 들어서며 변하기 시작했다. 대명사대와 국익이 마찰을 빚을 경우에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조선초기의 조건부적인 대명사대관이 점차 대명사대와 국익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사대와 국익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는 절대적인 사대관으로 바뀌면서 진화한 것이다. 특히 조명관계의 본질을 기존의 군신관계에 부자관계를 새로 더해 절대개념으로 이념화한 것은 조선왕조의 이후 역사 진행 방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17세기 초 광해군 때 격렬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광해군 때 파병 여부 논쟁은 단순히 외교노선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명사대를 국가정책의 한 근본으로 천명한 조선에서 모든 외교의 시작과 끝은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명나라를 하나의 대국이 아닌 유일한 상국(천자국)으로 보고, 더 나아가 부모라는 개념까지 도입해 군부의 나라로 섬긴 조선사회에서, 대명사대 원칙에 약간이라도 저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관계라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떠나 국가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배금론(排金論, 명을 위한 파병 찬성론)을 가리키는 용어의 선택에서 신료들이 정론(正論)이라는 단어를 고른 데<sup>40)</sup> 반해 광해군이 사의(邪議), 곧 사론(邪論)으로 규정<sup>41)</sup> 사실은 이때의 논쟁이 단순히 정책 대결의 차이로 인한 논쟁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도통(道統)이니 학통(學統)이니 종통(宗統)이니 하여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통을 따지는 성리학적 유교지상주의로 들어선 조선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그에 대한 평가가 정론과 사론으로 갈렸다면, 그 문제는 존재론적인 논쟁으로,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임을 뜻하는 것이다.<sup>42)</sup> 요컨대, 광해군 때 논쟁의 성격은 단순히 파병 여부 논쟁이 아니라 곧 조선의 국가 정체성 논쟁이었던 것이다.

냉전구도 붕괴 후 대한민국 사회의 한미관계 논쟁이나 대북정책 논쟁도 이와 흡사한 면이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 해외파병의 찬반론이라는 외피 속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를테면, 한미관계나 대북정책 관련 논쟁들이 종종 대한민국의 국시(정체성) 논쟁으로 발전하는 현실이나, ‘좌(익)빨(갱이)’이나 ‘수(구)꼴(통)’ 같이 도저히 양립이 불가능한 용어들을 사용해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원수인 양 공격하는 현실은 17세기의 조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 구도의 변화라는 면에서도 그렇다. 사실, 21세기 국제정세의 흐름은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다. 17세

40) 『광해군일기』 172권 13년 12월 5일 임신.

41) 『광해군일기』 172:12b, 13년 12월 26일 계사.

42) 조선사회에서 정(正)·사(邪)·이단(異端) 등의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Donald Baker, “A Different Thread: Orthodoxy, Heterodoxy, and Catholicism in a Confucian World.” In JaHyun Kim Haboush and Martina Deuchler, ed., *Culture and State in Late Chosŏn Korea*(Cambridge, The Harvard University Asian Center, 1999), 199-230 참조.

기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이 후금(청)이 만리장성의 산해관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명이 곧 힘을 회복해 후금을 정토하고 명질서를 회복할 것이라 굳게 믿었듯이, 비록 미국이 지금은 잠시 흔들릴지라도 혹시 이른 시일에 곧 권토중래하여 ‘팩스 아메리카나’를 재건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가시화 될 무렵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물론 여전히 미국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게 ‘올인’할 시기는, 그것도 다분히 한미혈맹을 존명여의와 같은 절대불변의 이데올로기로 만들면서까지 올인할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단 파병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외교 사안들이 이런 구도에서 건설적으로 논의되고 전개된다면, 파병을 하건 하지 않건 단순한 결과 자체보다도,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큰 진일보라는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建州私志』, 『清初史料四種』(北京: 北平圖書館, 1970).
- 『明史』(臺北: 國防研究院, 1963).
- 『宋子大全』,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민족문화추진회, 1993).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공개자료.
- 계승범. 2006.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大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_\_\_\_\_. 2007.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歷史學報』 193. 역사학회.
- \_\_\_\_\_. 2008. “나선정벌과 申瀏의 北征錄”, 『軍事史研究叢書』 5. 국방부군사편

찬연구소.

- \_\_\_\_\_. 2009a.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 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 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b.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 심양섭. 2007.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과 파병 결정 과정”, 『해외파병사연구총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鄭杜熙. 1997. 『朝鮮時代 人物의 再發見』. 일조각.
- 曹永祿. 1966. “水牛角貿易을 통해 본 鮮明關係”, 『東國史學』 9. 동국대학교사학회.
- 조진구. 2007.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박정희 정부의 외교적 이니셔티브”, 『해외파병사연구총서』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Kye, Seung B. 2010. “Huddling under the Imperial Umbrella: A Korean Approach to Ming China in the Early 1500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No. 1. Seattle: Society for Korean Studies.
- Mote, Frederick W. 1974. “The Tu-mu Incident of 1449”. in Frank A. Kierman, Jr. and John K. Fairbank eds. *Chinese Ways in Warfa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witchett and Grimm, eds. 1988. “The Zhengtong, Ching-tai, and Tien-shun reigns, 1436-146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Chosŏn Dynasty and the Republic of Korea:  
Diachronic Debates on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Abroad**

Kye, Seung-Bum(Sogang University)

With a focus on a series of court debates on the Ming/Qing Requests for Chosŏn Troops in the 1400s to 1600s, this article examines the Chosŏn elites' view of 'China' in connection with the replacement of the Ming order with the Qing order in the 1600s and compares it with contemporary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wo powers that have potential to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n the 1400s, *sadae*, literally meaning "serving the great", suggested a sort of utilitarian and contractual relation with the Ming, implying that the suzerain state could be replaced anytim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the 1500s, however, this concept shifted towards an immutable, sacrosanct union based on Confucian moral values in which the Koreans viewed the Ming as a ritual father as well as the suzerain: obedience to the Ming was regarded as natural law, like the yin-yang and father-son relations. This new Korean view of Ming China became a snare to the Chosŏn dynasty in the early 1600s, in which the Manchu launched a series of military

campaigns against Ming China. In an attempt to extricate Korea from this paradoxical crisis, the king rejected the Ming demand for Chosŏn troops and communicated directly with the Manchu, while his court officials were eager to line up more closely with the Ming against the Manchu. These opposing attitudes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as any friendly approaches to the Manchu would inevitably undermine the existing relationship with the Ming. The debate, therefore, was not merely on the matter of diplomacy but a matter of national identity, the very *raison d'être* of the Chosŏn dynasty in the 'Sino-centric' East Asian world order.

This article correlates such Korean experiences in the 1600s with the contemporary Korean attitu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ing PRC and diagnoses the nature of the current debates on the American requests for Korean troops in Iraq and Afghanistan as disputes on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raison d'être*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under the American Occupation(1945-48), protected by the Americans during the Korean War(1950-53), and secured under the US umbrella during the Cold War(1954-89).

Key Words: Chosŏn, Ming, Qing, USA, PRC, national identity

접 수 일: 2010년 9월 10일

심 사 일: 2010년 9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0월 5일